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 - 역사와 현황

구 춘 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2004년 3월

독일은 1990년대 중반까지 주목할 만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기록해 왔다. “토요일에 아빠는 나의 것”이라는 구호의 포스터가 곳곳에 나붙던 1955년 주당 노동시간은 48.8시간에 달했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40년이 지난 1995년 금속·철강·전자산업 등에서 주당 35시간이 현실로 등장하였다. 즉 4반세기 동안 13.8시간 또는 약 1.7 노동일 분의 자유시간이 창출된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의 개선 및 인간적 복지의 토대임을 고려할 때, 이는 대단한 사회적 진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독일은 몇몇 정치인들과 기업단체가 지적하는 “여가를 즐기는 공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현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가진 국가군에 속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은 더 이상 낙관적인 것이 아니다. 주당 35시간은 일반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구 서독 지역의 몇몇 산업부문에 선택적으로 관철되었고, 따라서 일련의 다른 산업부문들 및 구 동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대신 그룹 및 작업장 단위의 선택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최근 지배적인 모습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적으로 악화된 대량실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동시간의 단축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지 않는 점 역시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Internet: <http://www.fes.or.kr>

I. 들어가는 말

인간의 해방을 자유시간의 확대로부터 정의한 마르크스의 이상이 설령 그가 구상한 방식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늘날 독일에서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음은 다음의 수치가 잘 보여준다.

『공산당 선언』이 출간된 1848년 독일의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4-16시간, 그리고 주당 80-85시간에 달했던 반면,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의 노동시간은 주5일 근무제에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정착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에게 연간 6주의 휴가가 일반적으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독일의 연간 노동시간은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및 삶의 질의 개선, 그리고 인간적 복지의 토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로 옮겨 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였다. 반면 고용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항상 비용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산성의 상승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이는 단위임금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며, 따라서 고용주들은 임금의 상승을 꺼리듯이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회의적이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즉 자본과 노동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긴장 아래서 실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 측에게 노동시간의 단축은 항상 쟁취의 문제로 등장했으며, 반대로 자본 측에게 이는 강제된 양보를 의미했다. 어느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독일에

서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운동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의 결과임을 잘 보여준다. 1889년 하루 8시간 노동이 국제 노동운동의 핵심 구호로 등장한 이래 이 요구가 실현되기까지 독일의 노동운동은 사반세기를 투쟁해야 했다. 토요일에 아빠는 나의 것(Samstags gehört Vati mir)이라는 1950년대 초반 독일 노동조합의 캠페인은 1960년대 말에 들어서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

1970년대 말 이후 독일의 노동조합운동은 당시 표준 노동시간으로 정착한 주당 40시간의 선을 넘기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 1984년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 및 인쇄·제지노조(IG Druck und Papier)는 주당 35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감행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공세적인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을 배경으로 이 시기에 연간 6주의 휴가가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단체협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독일 노동조합들의 오랜 투쟁은 실로 주목할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과거 연방총리를 역임했던 헬무트 콜(Helmut Kohl)은 독일을 종종 여가를 즐기는 공원(Freizeitpark)으로 지칭하였고,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 역시 이 단어를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여가를 즐기는 공원은 일종의 부정적 유행어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또한 사용자단체들 역시 독일의 특별히 짧은 노동시간을 지적하면서, 이를 높은 임금과 함께 독일 생산입지의 부정적 요인으로 강조해 왔다. 한편,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독일의 노동조합들조차 최근에 들어서는 이를 더 이상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지 않는다.

독일은 과연 여러 정치인들의 우려처럼 집단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공원으로 변모하였는가?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은 오늘날 어디까지 와있는가?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과정이 보여준 쟁점과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 글은 전후독일의 노동시간단축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II. 주당 40시간 노동으로 가는 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경제의 혼란은 노동시간의 길이에도 반영되어, 1946/47년 주당 노동시간은 불과 39시간 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독일 경제의 재건이 본격화되는 1948/49년(통화개혁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설립)을 기점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시간 역시 급격히 늘어난다. 독일 경제의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독일의 주당 노동시간은 48.0 시간, 그리고 전후 경제 재건의 완성을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인 1955년에 노동시간은 무려 48.8 시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연장, 또는 보다 정확히 얘기해 전쟁 전 수준으로의 복귀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단체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갔다. 1952년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강령은 주당 40시간과 주 5일 노동제의 점차적 실현을 향후 핵심적인 노동정책의 목표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한 선두주자는 무엇보다 금속노조였다. 금속산업에서는 1956년 10월 1일 이른바 브레

멘 합의를 통해 주당 45시간 노동의 도입이 확정되었다. 금속노조는 뒤이어 1959년 1월 1일 부로 주당 44시간 노동을 실현하였고, 1960년 6월 사용자 측과 주당 40시간을 향한 단계적 계획의 도입에 합의하였다. 이로부터 6년 반이 지난 1967년 1월 1일, 금속산업에서는 주 5일 노동제 및 주당 40시간 노동이 현실이 되었다. 다른 산업분야들 역시 금속산업의 예를 따라 주 5일 노동제를 점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 1952년에 내건 주당 40시간 노동의 목표는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 궁극적으로 달성된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이 시기 실질노동시간의 발전이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정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토요일의 휴무를 위해 평일의 초과노동이 일반화됨으로써 실질노동시간과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의 괴리는 1960년대에 주당 평균 1시간에서 4시간에까지 이르렀다. 1970년을 예로 들면,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은 주당 40.7시간에 불과했지만, 실질노동시간은 44.0시간을 기록하였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겪고서야 실질노동시간과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의 괴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독일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1980년까지의 시기는 지속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시기로 지칭될 수 있다. 1960년대의 노동시간의 단축은 무엇보다 단체협약 상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고(단체협약 상의 주당 노동시간: 1960년=44.1시간, 1970년 40.7시간), 1970년대에는 실질노동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실질노동시간: 1970년=44.0시간 1980년=41.6시간). 주당 노동시간의 감소와 함께 연간노동시간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었는데, 이는 또한 연간휴가가 크게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2주의 연간휴가가 일반적이었는데, 1960년대 초에는 3주로, 1960년대 말에는 4주로,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약 5주로 휴가기간이 늘어났다.

III. 주당 35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

전후 재건의 불을 타고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독일경제가 주춤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급작스러운 경제위기를 맞으면서부터였다. 이해 독일경제는 -0.3%의 성장감소와 2.1%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거의 완전고용 상태 및 부분적인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던 독일에서 실업의 등장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기민련(CDU)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의 출범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노·사·정 협조행동(Konzertierte Aktion)이 시작되었다. 협조행동은 연방정부,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연방은행, 그리고 자문위원회 등이 참여해 임금정책적 조정을 시도한 기구였다. 노동과 자본은 이 협조행동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독일경제는 1968년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들어 독일경제의 전후 고도성장기가 마감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진다. 경제성장은 눈에 띄게 정체되기 시작했다. 생산성 상승의 둔화와 함께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였으며, 가격과 임금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증대되었다. 1953-57년의 기간 중 불과 0.9%에 불과했던 독일의 연평균 인플레이션

은 1964-67년 2.7%로, 1972-75년의 기간 중에는 무려 6.7%로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투자의 상대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투자능력의 잠재적인 위기로 연결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결합했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중반 독일경제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다른 한편, 투자의 감소는 고용의 축소 및 실업의 증가를 가져왔고, 실업의 증가로 인해 성장과 완전고용의 전제 아래 성립된 복지국가의 비용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1966년 0.7%에 불과했던 독일의 실업률은 1975년에 무려 4.7%에 이르게 된다. 실업의 증가와 함께 1969년에 454억 마르크에 불과했던 독일 연방정부의 채무는 1975년에는 1,850억 마르크로, 사민·자민연정(SPD/FDP)이 붕괴된 1982년에는 무려 3,091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본격적인 대량실업 시대의 개막은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음은 물론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의 재분배는 대량실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노동조합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이미 1929/30년 세계경제대공황의 와중에 급격히 치솟은 실업률에 직면하여 주당 40시간의 실현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 1977년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완전고용의 재실현을 위한 제안들이라는 고용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이 문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실업률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산별노조들의 회의에서도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고, 예컨대 금속노조의 1977년 총회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놓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이 총회에서 조선·철강산업 등

당시 위기에 직면한 산업부문들은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로 주당 35시간을 주장했고, 금속노조의 지도부는 6주의 연간휴가 확보를 선호하였다. 이 안들은 결국 표결에 부쳐져 275대 265로 주당 35시간의 요구가 관철되었으며, 철강부문에서는 1978년 여름의 단체협상부터 이 요구가 등장했다.

그러나 주당 40시간이 노동과 자본간의 큰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실현되었던 반면, 주당 35시간 노동으로 가는 길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들어 전후 독일모델의 특징인 노동과 자본간의 타협 및 사회적 합의가 균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미 1969년 철강·금속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이른바 "9월 파업"은 노조 지도부가 협조행동에 참여한 데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 9월 파업을 계기로 파업의 무풍지대였던 1960년대 독일 노동계의 정적이 막을 내리고, 독일의 노동조합들 역시 1968/69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예를 따라 정치적으로 급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자유주의적 개혁시기"로 지칭되는 1969년에서 1974년의 기간은 전후 독일에서 가장 빈번하게 파업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이 파업운동은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임금인상을 가져왔지만, 기업들에게는 생산성의 하락과 함께 등장한 수익성의 위기를 보다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공세에 대한 자본의 대응 역시 대단히 완고한 성격의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권리의 부분적 확장을 가져온 1972년 사업장공동결정법, 그리고 1976년 대기업공동결정법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1970년대 중반 시장경제나 노조국가냐 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이어지면

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역공이 진행되었다. 1977년 6월 자본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대기업공동결정법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다. 1979년 3월 헌법재판소는 사용자단체들의 소원을 기각했지만, 그러나 노동과 자본간의 타협과 합의는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은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자본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1967년에 결성된 협조행동에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독일 사회협약정치(상징으로 간주되던 협조행동)는 결성 10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과 자본의 대치관계 아래서 주당 35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1978/79년 장장 44일 동안에 걸친 철강노동자들의 파업은 주당 35시간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진행되었다. 물론 이 파업을 통해 주당 35시간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6주의 연휴가 보장되는 연간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향후 5년, 즉 1983년까지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조합 내부에서 논쟁되었을지언정,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비로소 1983/1984년에 들어서야 주당 35시간은 중대한 노동정책적·사회적 테마로 다시 부상하게 된다.

주당 35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의 선두주자는 다시금 금속노조와 당시의 인쇄·제지노조였으며, 금속산업의 핵심지역인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영측은 노동시간 단축의 협상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따라서 금속노조는 일련의 자동차공장 및 부품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함으로써 협상을 촉구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경영측은 서독 전역에 걸친 공장폐쇄로 대응하였다.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7주간에 걸친 파업 및 공장폐쇄의 실랑이는 과거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레버(Georg Leber)에 의해 결국 중재되었다. 이른바 레버-타협으로 알려진 이 중재안은 한편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1985년 4월부로 주당 38.5시간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경영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종의 유연화 조항을 삽입하였다. 즉 주당 38.5시간의 구체적인 실행은 각 작업장의 노사합의에 따라 37시간에서 40시간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유연화의 내용이다. 또한 작업장의 사용시간 및 기계의 가동시간이 단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중재안에 명기한 것도 이후 경영측의 유연화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IV. 독일의 주당 35시간 노동
- 현황과 문제점

노동조합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와 경영의 유연화 요구를 중재시킨 레버-타협은 이후 다른 산업분야들에서도 일종의 모델로서 수용되었다. 주당 35시간을 향한 1984년의 격렬한 투쟁 이후 독일에서는 노동시간도 단계적으로 단축되었고, 동시에 노동관계도 유연화되어간 셈이다. 1989년에는 주당 37시간이, 1993년에는 36시간이, 그리고 결국 1995년 10월 1일부로 주당 35시간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는 독일의 전지역과 전산업에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 서독지역의 금속·전자·철강·인

쇄·제지업 등에만 해당된다. 구 동독 지역의 경우, 통일 이후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 서독 지역에 비해 여전히 노동시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금속노조는 2003년 6월 구 동독 지역에서도 주당 35시간을 실현하기 위해 약 4주에 걸친 파업을 단행하였다. 파업의 목표가 전체적으로 달성되지 않았어도, 철강부문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주당 35시간의 단계적 실현이 합의된 상태이다.

표 1. 구 동독 지역의 주당 노동시간의 변화 (1991, 1995, 2000)

	1991	1995	2000
	40.40	39.44	39.13

자료: 독일고용문제연구소(IAB)

오늘날 독일에서 주당 35시간의 전면적 실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난 사반세기 동안 구 서독 지역 전체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1980년과 비교해도 1995년의 단체협약 상의 주당 노동시간은 무려 2.43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속노조와 인쇄·제지노조를 필두로 전개된 주당 35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은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의 전반기에 여전히 0.8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데에 비해, 1990년대 후반기에는 겨우 10분의 노동시간만이 단축되었다(표 2 참조).

표 2. 구 서독 지역의 주당 노동시간의 변화 (1960-2000)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44.56	41.46	40.13	39.76	38.50	37.70	37.54

자료: IAB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 단축의 정체는 실질 노동시간의 발전에도 표현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완전고용 상태 노동자들의 실질 주당 노동시간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1983년에 이들의 실질 주당 노동시간이 40.8시간을 기록한

것에 비해, 1990년에는 39.9시간으로 거의 한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 완전고용 상태 노동자들의 실질 주당 노동시간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3 참조).

표 3. 실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 (완전고용 상태의 남녀; 1983-1999)

1983	1985	1988	1990	1992	1994	1998	1999
40.8	41.0	40.5	39.9	39.7	39.7	40.1	40.1

자료: Eurostat Erhebung über Arbeitskräfte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노동시간 단축의 정체는 경기 국면적인 요인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지구화에 따른 자본의 생산입지 공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통적 산업 및 노동계급의 축소 - 그리고 이와 결부된 노동조합의 위기 -, 또한 공급측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재편 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무엇보다 실업문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단축의 정체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변모한 경제환경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전히 실업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임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독일 경제·사회과학연구소(WSI)의 계산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6년 사이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약 일백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이 기간 동안 전체 노동량이 약 2.5%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업 종사자들의 수가 1985년 비해 6.4%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같은 시기 부분시간노동(Teilzeitarbeit)의

비중이 전체고용의 약 13%에서 19%로 늘어난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해 보인다. 요컨대 노동시간의 단축이 없었더라면 그 동안 이루어진 주목할 만한 생산성의 상승을 고려할 때 대량실업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 단축의 정체 및 완전고용 상태 노동자들의 실질 주당 노동시간의 경미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들 - 예컨대, OECD의 노동시간 국제비교 - 에서 발견되는 연간 노동시간의 감소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부분노동시간 고용(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여성의 부분노동은 독일은 물론 유럽연합(EU) 전반의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에 가장 역동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여러 통계들이 지적하는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는 단체협약 상의 노동시간 또는 완전고용 상태 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시간의 단축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부분노동 특히 여성 부분노동 종사자들의 주목할 증가와 관련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하나의 사실은 작업장 또는 그룹 단위의 노동시간 단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룹 단위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기정년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84년 대량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가 조기정년을 장려한 이래, 이 제도는 특히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서 대규모로 활용되었다. 작업장 단위의 노동시간 단축은 1994년 유명한 폴크스바겐(VW)의 실험 이래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폴크스바겐의 경영진은 4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모든 VW 작업장에서 주당 28.8시간을 실행할 것을 노조측과 합의하였다. 노조측은 동시에 임금삭감과 유연화를 수용해야 했지만, 어쨌든 회사 소유의 대량해고를 회피할 수는 있었다. 폴크스바겐의 실험 이래 여러 산업부문의 단체협약은 고용의 보장을 위해 각 작업장 단위의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대신 그룹 및 작업장 단위의 선택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이 최근 독일 노동시간 단축 형태의 주목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적 구조 및 발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제공된다. FES-Information-Series는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정책 대안 모색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시도이며,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FES-Information-Series의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추적하고 평가할 능력을 구비한 전문가에 의해 집필된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그들이 관련된 기관 및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 본문이 올려 있으며, 본 재단 사무소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Copyright 1998-2004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